

###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돌입

# 상임위 '문화안전소방위' 위원장 누가 뛰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는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 6개의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하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소관부서도 전반기와 다소 변경해서 운영한다.

이러한 6개의 상임위원회를 책임질 상임위원장 선거가 오는 6월 27일 열리게 되는데 상임위원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의원들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중 우선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하반기에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개칭해 관광과 안전을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도청 내 소관부서도 다소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는 김정기 의원(부안)과 박정규 의원(임실)이 출마를 표명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열정적인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부안군이 지역구로 8대 부안군의원을 거쳐 12대 도의원에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상서면 동림마을에서 오랜 기간 이장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8대 부안군의원에 당선되었다.

8대 부안군의원 당시 초선임에도 운영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의원 간 소통을 잘하고 신망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부안군이 지역구로 8대 부안군의원을 거쳐 12대 도의원에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상서면 동림마을에서 오랜 기간 이장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8대 부안군의원에 당선되었다.

8대 부안군의원 당시 초선임에도 운영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의원 간 소통을 잘하고 신망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문화건설안전위서 개칭... 김정기·박정규 의원 등 거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잘 활용해 후반기에 의의가 되어 관광, 문화, 체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보다는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자 하는 소신을 갖고 있다.



김정기 의원



박정규 의원

젊어서부터 농촌에서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는 어르신들과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하여 낮은 자세로 헌신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평을 들으며 지역민들의 신망을 얻어 당선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도 농촌 어르신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장애인들을 비롯 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돕기 위해 회기 중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끈을 질끈 동여매고 누벼며 밭 벗고 나서서 일하다 보니 임실에서 일 잘하는 시인한 일꾼이라는 평을 들으며 지역민들의 신망이 두텁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며 당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정규 의원은 위원장에 선출된다면 자신의 명예보다는 도민들을 위

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위원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분 한 분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 화합해 하나된 모습으로 일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전북이 더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업유치가 잘 안되고 있으니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찾아오는 전북,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세계적인 K-POP 그룹인 BTS(방탄소년단)를 키운 방식 역시도 이곳 전북 출신이라며, 위원장이 된다면 청소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많이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과 문화와 예술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도내 지역 정가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문화와 안전, 체육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화두를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 상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자세가 돋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박정희 도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사전준비 미흡'



시행 식 달재에 접어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의 업무경감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미흡한 사전 준비로 실제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희 의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는 하나, 이미 사전에 나섰던 우려와 더불어 현장의 학교폭력 전담 교사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했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어, 실제 지난 4월에는 전담관 배치 방법을 도입 한 달 만에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는 도입 이전부터 학생들이 수사받는다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수사관들이 오히려 빠른 대처가 생략된 학교폭력 사안을 지연시키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무분별한 정책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의 일환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차별이 아닌 계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관에게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조사관 제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 “국내 플랫폼 노동자 수 급증 노동현실 반영 지원제도는 부족”

김희수 도의원, 산재보상보험 지원 촉구



김희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구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다"면서, "국내 플랫폼 종사자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속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수수료료를 더 받기 위해 시간을 다뤄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특성상 산재보험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의 산재보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산재보험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작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올해 1월에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 조례입법평가 추진 방향·후속조치 사항 논의

전북자치도의회, 2024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7일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지난 17일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3년도 하반기에 시범운영한 조례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평가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도의원,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등 13명으로 위촉·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수 위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조례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입법평가를 시범운영 해왔

다. 조례 입법 평가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종합적인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이만호 기자

## “농업민생 4법 처리로 농민 생존권 보장”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사의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2024년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쌀값 정상화를 도



김동구 의원

모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하게 하락 폭이 심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한우 산업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법안',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외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농어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사의법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들 법안은 기상이변과 전쟁 등의 여러 요인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위협에 직면해 있

고, 농산물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 민생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느 것 하나 정점으로 삼을 만한 법안은 하나도 없으며, 국회와 정부는 농업 민생 4법은 곧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임을 명심하고 얼라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김동구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회는 농업 민생 4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수용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도금고 관리개선 필요”

김성수 도의원 “지역민 상대 고금리 이자장사 전은 규탄”



김성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 1)은 지난 17일 열린 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 수준의 예대마

배에 이르며, 같은 지주 회사인 광주은행에 비해서도 2배이상 높다.

김성수 의원은 또 "같은 36군용지주 내에서도 전북자치도민들이 주 고객이 되는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에 비하여 두배에 가까운 예대금리차로 도민들을 상대로 배를 불리고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 여차별이자 지역은행 배려의 명분을 이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주장했다.

또한, "2금고의 평균잔액이 1금고의 두배가 넘는 상황에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차후 금고선정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협력, 공헌, 지역민에 대한 상생 정책 및 이자율 등을 감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2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대폭 높이던지, 과도하게 올려놓는 2금고의 자금을 일부 1금고로 넘겨주는 방안도 강구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